

05|06 2009 | Vol.08



세상사는 풍경 | “두 아들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에요” 04

특집

'행정규칙 개선'으로 국민과 通하다!

ACRC Focus | 더 편리한,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08

시민발언대 |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12

通

소통

해외 청렴 리포트 | 부패나라에서 청렴나라로 화려하게 변신한 캐나다 16

국민생활공감

솔로몬의 선택 | “교통사고 현행범 잡기 위한 불가피한 음주운전도 위법행위인가요?” 20

고충처리 카페 | 양주 TSA파트 앞 교통체계 개선 22

민원실 풍경 | 전국 어디서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담센터와 상담하세요! 24

기분 좋은 편지 | 국민권익위원회,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주세요! 26

기분 좋은 만남 | 부패 신고자의 안전지킴이 28

행복 메신저 | 물안개 가득한 두물머리에서 다시 만나요! 30

청렴예찬 | 공기업 최초 부패방지 종합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코레일' 32

아름다운 약속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35

感

여유

여행의 재발견 | 가난뱅이 재상 화려하게 부활하다<광명 오리 이원익 사적지> 38

문화로 보는 세상 | 고단한 일상의 얼룩을 빨래로 지워요! 뮤지컬<빨래> 42

돈 버는 방법 | 경제불황시대, 가정경제를 살리는 법은 따로 있다! 44

생활법률110 | 불법대출의 탓에 걸리다! 46

ACRC NEWS 48

국민 참여 마당 50

“두 아들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에요”



“아빠, 빨리 달려” 아들이 찬 공을 쫓느라 여념이 없는 늦깎이 아빠 유해연 씨(50, 서울시 중계동)의 주말은 어김없이 아이들과 함께다. 성모(7)와 영모(3)는 아빠와 함께 공을 차는 것이 신나는지 연방 ‘까르르 까르르’ 하고 웃어댄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엄마 이덕희(48)씨의 표정에서 행복이 묻어 나온다.

1. 함께라면 두려울 것 없는 두 형제 성모와 영모
2. 아버지께 피아노 실력을 뽐내는 성모



가슴으로 두 아들을 낳은 이덕희 씨는 아직도 7년 전 큰 아들 성모를 처음 만난 순간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생후 40일 된 성모를 받아 안는 순간 너무 떨렸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차 오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성모를 보는데 ‘아, 내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유씨 부부 또한 여느 부부들처럼 아이를 기다렸다. 이들은 시험관 시술도 해보았지만 끝내 아이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친분이 있는 신부님이 입양을 권유했다.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전문입양상담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첫째 아들 성모를 공개입양 했다.

큰 아들 성모가 5살이 되던 해, 유씨 부부에게 ‘자신에게도 남동생이 필요하다’는 성모의 강력한(?) 요구에 유씨 부부는 2007년 다시 생후 13개월의 영모를 공개입양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해연 씨의 가족이 탄생한 것이다.

“형, 나 로봇트, 그거 그거” 형 성모가 가지고 노는 것을 어김없이 뺏는 동생 영모. 하지만 성모는 동생이 원하는 거라면 주저 없이 줘버린다. 자신이 그렇게 원한 남동생이라 그런 것일까? 동생 영모를 사랑하는 형 성모의 마음은 대단하다.

“성모와 영모는 하늘이 준 축복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일을 숨길 필요가 있나요? 공개입양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밀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죠. 입양이지만 내 자식, 내 아이가 생긴 것인데 축복 받아야죠.”

영모와 성모가 가족이 된 것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씨 부부지만 어린 성모에게 입양사실을 알려야 했던 어려운 순간은 있었다.

“아마, 성모가 네 살 때였을 거예요. 유치원 마치고 와서는 대뜸, ‘엄마, 성모도 엄마 배에서 나왔어?’라고 묻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어린 성모가 과연 입양을 이해할 수 있을까

를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는 어린 성모를 무릎에 앉히고는 너를 낳아준 엄마는 따로 있다고 이야기 했죠. 그랬더니 그 어린 것이 ‘슬프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털처럼 약하고 여린 성모의 마음이 아팠을 것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미어져 오는 엄마다. 언젠가 둘째 아들 영모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진다. 엄마의 이런 마음을 아는 것일까. 영모가 달려와 엄마의 품에 안긴다.

두 아들, 대한민국 대표 인재로 키울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애플사의 스티븐잡스, 세계적인 가수 에릭 크랩튼 또한 입양된 아이들이었다는 사실. 저희 부부는 성모와 영모를 이들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겁니다. 이것이 하늘이 저희 부부에게 내린 사명 같아요.”

영모와 성모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로 키우고 싶다는 유해연 씨. 매일 밤 두 아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욕이 마구 생긴다. 두 아들이라는 보물을 얻고 나서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이 부부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에게 입양은 그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가족을 보며 생각한다. 과연 자신의 아이처럼 기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들은 답한다. 키우다 보면 입양한 아이가 아닌 그냥, 내 아이고, 내 가족이고 내 사랑이라고. 입양을 통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키우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용기 있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

! 입양을 도와주는 기관 !

- 홀트아동복지회 : 02-332-7501~4
- 동방사회복지회 : 02-331-3942
- 성가정입양 : 02-764-4741~3





‘행정규칙 개선’으로 국민과 通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생활을 공감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만 여건에 달하는 현행 행정 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정비하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규칙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물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기에 귀추가 주목 된다.

***08** ACRC Focus 더 편리한,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12** 시민발언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행정규칙
개선, 국민과
通하다!

● ACRC
Focus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법령보다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행정규칙이다. 정부수립 후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는 행정규칙. 국민과 기업활동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행정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더 편리한,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1만여 건의 행정규칙개선 및 정비



다섯 살 아들을 둔 가정주부 김씨는 지난 일요일 약국을 찾아 헤매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숨이 찬다. 집 앞 놀이터에서 놀던 아들이 넘어져 상처가 났고 당황한 김씨는 열린 집으로가 약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항상 구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비상약들이 다 떨어진 것이다. 그녀는 '오늘은 일요일인데 약국 문이 열려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을 향해 달렸다. 왜냐하면 언젠가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약국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그녀는 약을 빌리기 위해 옆 동네 사는 언니 집으로 향했다.

며칠 후 그녀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공휴일에도 약국이 돌아가며 문을 연다는 당변약국제가 법에 따라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녀는 공휴일에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행정규칙을 개선·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규칙은 무엇인가. 행정규칙은 행정주체가 제정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일반적인 규정을 이야기한다. 행정규칙은 외부의 통제 없이 만들어졌음에도 국민의 생활과 기업경영에 법령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규칙을 찾아 정비하고 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개정하도록 한 행정규칙이다.

{ 달라진 행정규칙으로 대한민국이 편해집니다! }

1

행정규칙
개선

365일,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어요!

당변약국 지정·운영 의무화 관련

●● 공휴일, 문을 연 약국은 어디에 ●●

현재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약국이 돌아가며 문을 여는 '당변약국제'가 있다. 이는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영업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당변약국이 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홍보 부족 등으로 당변약국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부작용 우려 등이 없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되, 그 대안으로 대한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당변약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 당변약국의 지정·운영을 의무화 하기로 ●●

국민권익위는 현행 당변약국제를 법령화하고 당변약국의 지정·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초단체별 당변약국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미운영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1339(응급의료센터), 129콜센터, 네이버 '당변약국'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당변약국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당변약국제 의무화로 인한 의약품에 대한 구매 접근이 쉬워져 국민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행정규칙
개선

화장품, 이제 사용기한 보고 선택하세요!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관련

○○ 화장품 유통기한의 부재로 변질된 화장품 사용 피해 잇달아 ○○

일본은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이미 법제화하였고, EU국가들은 유통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레티놀과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에 한정해 '사용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어 왔으며 소비자들은 변질된 화장품에 쉽게 노출되어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같은 증상 등 피부 부작용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화장품,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표시해야 ○○

국민권익위는 기존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만 기재되어있는 화장품에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행정규칙을 개선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3

행정규칙
개선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이 올라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상향 관련

○○ 2004년 이후 고정된 기본재산액은 실질적 재산가치 하락 반영하지 못해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관련하여 대상자의 재산가액(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생활에 필요하여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 원 이었다. 기본재산액은 결정시 지역별로 최저 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전세가격 등이 고려되어 산정된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주거용 재산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기본재산액은 실질적 재산가치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다. 즉, 현재 공시지가와 전세가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간 동결되어 있는 기본재산액은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높아진 생활수준에 맞춰 기본재산액과 잉여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 하는데 앞장섰다.

○○ 기본재산액 상향 조정하기로 ○○

국민권익위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5,400만 원(42% 상향), 중소도시 3,400만 원(10% 상향)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본재산액의 상향으로 수급대상자들의 재산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4

행정규칙
개선

희귀의약품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완화 관련

●● 미흡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

희귀의약품은 국내 환자수가 2만 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연간 총 수입실적 및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에 의해 지정된다. 또한 희귀의약품은 현재 연간 총 수입실적이 100만\$(미화) 이하이거나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이 10억 원 이하인 의약품으로 지정되고 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통관절차상 검정 또는 검사가 면제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이 간소화된다.

●● 희귀의약품의 범위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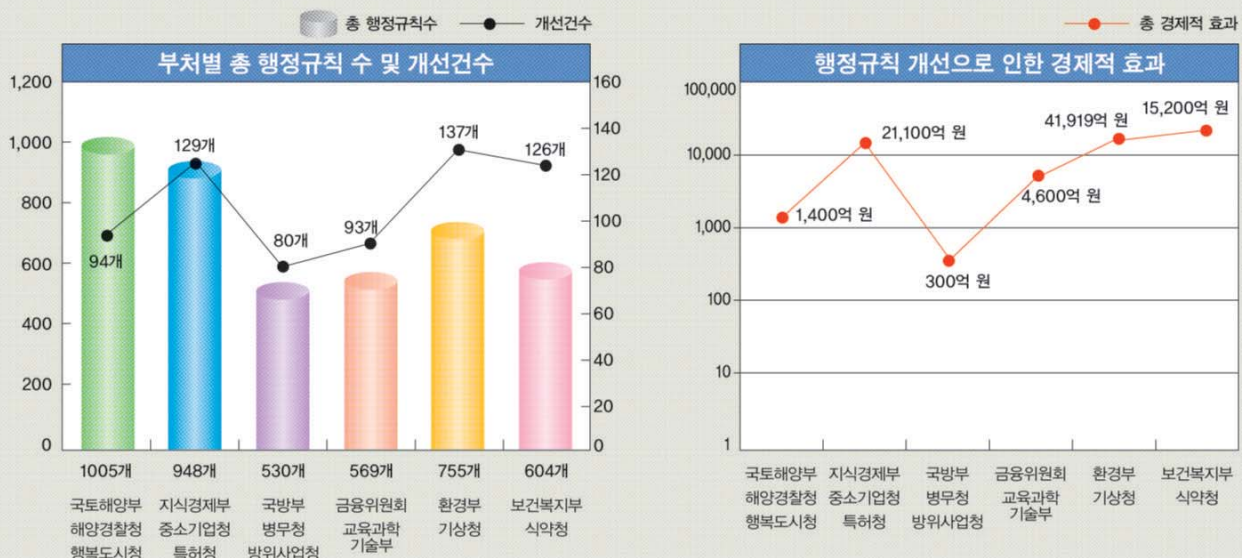
국민권익위는 연간 총 수입실적을 '100만\$(미화) 이하'에서 '150만\$(미화) 이하'로,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을 '10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각각 50%씩 완화하도록 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의약품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편한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규칙의 전면적인 개선·정비에 나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등 15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 659건의 개선과제를 도출, 계량화가 가능한 41건 만을 기준으로 연간 5조 7,000여 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규칙의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을 받고, 기업·자치단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들을 계속 선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등 15개 기관 소관 행정규칙 개선 실적 (08.08.05~09.04.28)



民, 행정규칙을 말하다

국.민.생.활.공.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실생활과 기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행정규칙 개선과 정비에 나섰다. 특히 당번약국제의 의무화, 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우체국 ATM 운영시간 확대, GMO 표시대상 확대 등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선된 행정규칙에 관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행정규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자.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꿈
꿔요!**

김슬기(26, 대학생)

저는 교사를 꿈꾸는 대학생으로 얼마 전 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중학교 육성회비를 없애자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했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더 많은 교육 관련 행정규칙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도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우정훈(30, 비보이전문MC)

중도장애인이 되고 난 후 사회가 장애인에게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중 장애인 주차장과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많은 불편이 따르죠. 건물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장애인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비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일쑤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민권익위에서 장애인이 평등해질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유통기한 표기’ 정말 반가운
소식이예요!**

강정미(34, 주부)

최근 화장품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 된다는 기사를 듣고 ‘왜, 진작 시행되지 않았나’ 하는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기 전용 화장품을 구입하여 아이에게 발라줬는데 아이얼굴에 붉은 반점이 올라왔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이 화장품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장품 유통기한 표기뿐 아니라 식품과 같이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행정규칙들을 더 많이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건강해져야 나라도 행복해져요!

조영임(30, 직장인)

언젠가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약국과 특정 제약회사가 서로 계획 하에 약품을 유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건강은 나 몰라라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것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通, 소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합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 라고 생각한 선생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른이 행복한 나라보다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기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16	해외 정령 리포트
20	솔로몬의 선택
22	고충처리 카페
24	민원실 풍경
26	기분 좋은 편지
28	기분 좋은 만남
30	행복 메신저
32	청렴예찬
35	아름다운 약속

부패나라에서 청렴나라로 화려하게 변신한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다. 영국의 통치가 확립된 '7년 전쟁 (1763)' 이후 캐나다는 영국계 주민들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통을 고수하는 프랑스계 주민과 대립하는 형상이 되었다. 그래서 옛 프랑스 식민지역이던 퀘벡 주는 영연방으로 편입되었지만, 영국 식민정부는 퀘벡의 문화 정체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뒤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경제가 발전하였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을 감안해서 2008년 \$39,300(CIA 추정)로 세계 14위이다. 캐나다는 1989년 설립된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의 회원국이며 APEC(아태경제협력회의)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앨버타 주의 오일 샌드에서 원유가 채굴되고 있는 산유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풍요로움에 일조한 것은 정부와 국민의 부패 척결 의지덕분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뇌물공여지수

에서 벨기에와 함께 1위를 차지하였다. 뇌물공여지수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하는 산업국가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을 조사하여 지수가 산출한 것이다. 이것은 부패의 공급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청렴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 기구가 실시한 '2008 부패인식지수'에서도 180개의 대상국 중 9위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청렴한 나라 중의 한 국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캐나다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캐나다도 식민지 시절과 20세기 초반 해도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후진국 중 하나였다. 관청의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은 곳곳에서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고 사회는 그 후유증에 심각한 탈수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지도층과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부와 기업의 부정부패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캐나다의 부패방지 기구로 '캐나다 왕립 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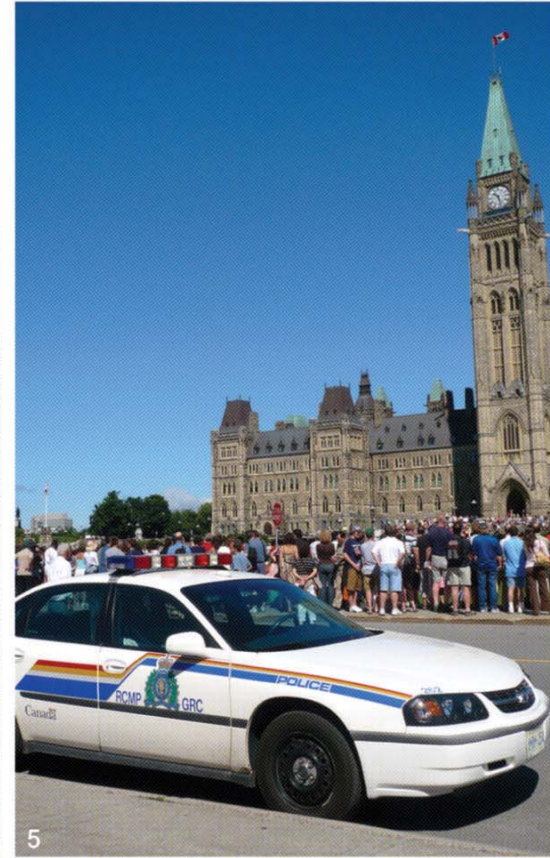


12. 캐나다 왕립 경찰 기마대는 부패방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빅토리아 의회

얼마 전 국제 반부패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8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에서 캐나다가 벨기에와 함께 8.8점을 획득하여 1등을 차지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2008 부패인식지수'에서도 9위를 해 청렴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굳혔다. 하지만 캐나다도 식민지 시절과 20세기 초 만해도 부정부패로 얼룩지며 정부와 기업의 정경유착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었다.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캐나다가 청렴한 국가로 되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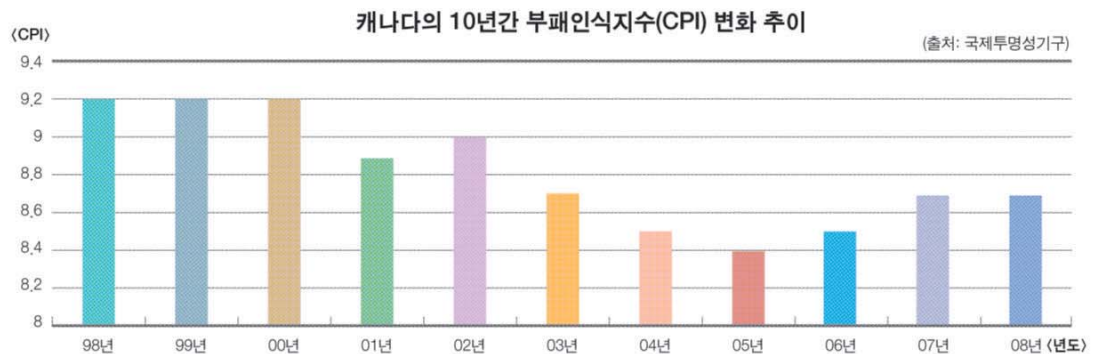


5

경찰대(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와 캐나다 국립경찰 등이 있는데 이들은 법에 따라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 부패방지 척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캐나다의 부패방지 노력은 그들의 법에도 잘 나타나 있다. 2005년에 발효된 국제연합의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과 발맞추어 캐나다에서는 2006년에 「연방책임회계법」(Federal Accountability Act)이 제정되어 책임회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관의 확립을 통해 연방정부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개정된 「공무원공개보호법」(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은 2007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공무원공개보호법」은 캐나다 연방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이 연방정부나 공기업 내부의 비리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무원들은 그들의 조직 내에서 형성된 범죄나 비리에 관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공공부문 부패방지 담당국장을 찾아갈 수 있다.

또한 캐나다의 부패방지 노력은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재무부에서 만든 기구인 FINTRAC (Financial Transactions Reports Analysis Center of Canada)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FINTRAC은 세계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데 철저한 돈세탁방지를 통해 부정부패에 의한 뇌물거래, 마약거래, 강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4. 캐나다의 부패방지에 노력하는 경찰서
5.6. RCMP의 경찰차와 해경 배 7. 캐나다에서는 'STOP' 표지판이 많은데 이를 위반하는 시민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캐나다에 부패사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05년에도 1990년대 후반 자유당 장 크레티앵 총리 시절에 벌어졌던 정부 예산 유용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자유당 정부는 프랑스어권인 퀘벡주의 분리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가 간신히 부결되자 퀘벡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가통합 홍보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이 홍보사업 예산 2억1300만 달러 중 8500만 달러 이상이 자유당 정부에 의해 유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관리들이 프로젝트를 따내려는 홍보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예산도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이 속속 폭로됐다. 이에 캐나다 의회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유당 폴 마틴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새 정부를 구성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는 조그만 부패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는다.

캐나다 국민의 철두철미한 도덕성

정부가 부패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캐나다 국민성 때문이다. 작은 것 하나에도 부패를 용납하지 않은 국민들 덕분에 정부 또한 부패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의 정직한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는 논문 하나가 있다. 버클리대학과 컬럼비아대학의 에드워드 미구엘 교수와 레이몬드 피시맨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뉴욕 시에 연체되어 있는 주차위반 건수는 차드와 방글라데시가 각각 1,243건과 1,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외교관의 신분으로 인한 면책특권 때문에 마음대로 주차위반을 해도 된다는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도덕적 해이가 불러일으키는 부패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틀어 한 건도 주차위반에 대한 연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캐나다 국민들의 정직한 마음가짐과 정직, 도덕이 몸에 자연스럽게 베어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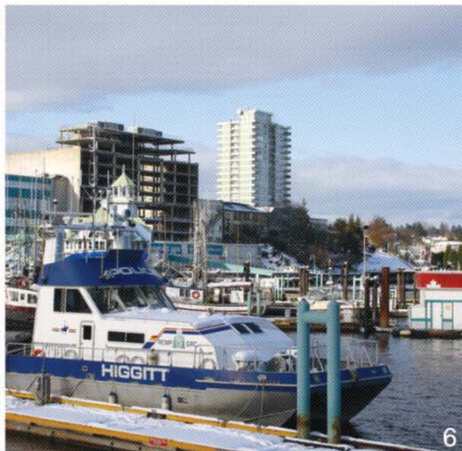
이러한 국민들의 도덕성은 다양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캐나다의 거리에서는 'STOP' 교통표지판을 지겹게 만나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이 교통표지판을 무시하고 주행하는 운전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규제하는 법 자체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단 위반하게 되면 벌금과 벌점이 내려지고 보험갱신 시 보험료인상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엄격한 법률규제가 마련해 철저하게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하여 법률 규제를 받는 사람들 자체가 드물다. 이 표지판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운전자들이 나만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시민 의식 덕분이다. 이처럼 높은 국민들의 도덕성이 정부를 감시하는 관찰기관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을 의식해 정부 또한 부패척결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부패방지 노력의 대가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패라는 괴물이 나라 전체를 삼켜버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필리핀이 그랬고, 인도네시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정권의 부패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안겨주기도 하였고, 아프리카와 이라크의 부패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기도 하였다. 클리트가드의 격언처럼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다.

그러나 캐나다의 반부패 노력의 대가는 이 나라들의 경제를 윤택하게 하였고 사회를 안정시켰으며, 결국 이들을 선진국으로 부상시켰다. 이 국가들은 행복한 나라의 건설이야말로 부패의 일소에서 시작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도 청렴한 나라가 되기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



6



7

교통사고 현행법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음주운전도 위법행위인가요?

뺑소니범 검거를 목적으로 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는 부당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등 돌
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위법행
위이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의 경우라면 어떨까? 국민권익위원회 소
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들어보자.



부지불식(不知不識) 간에 목격하게 된 교통사고 뺑소니 범행현장

2008년 11월 9일 오후 6시 50분쯤의 일이었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거주하는 택배 배달원 서모 씨(30, 남)는 아내와 함께 느긋하게 저녁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식당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서씨의 화물차 뒤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던 것. 서씨의 차를 받은 정모(34, 여)씨는 서씨가 상황파악을 위해 자신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급히 차를 몰아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다. 정모 씨는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거리에 앉아 물건을 팔던 노점상 김모(66, 여) 씨까지 덮칠 뻔하고서도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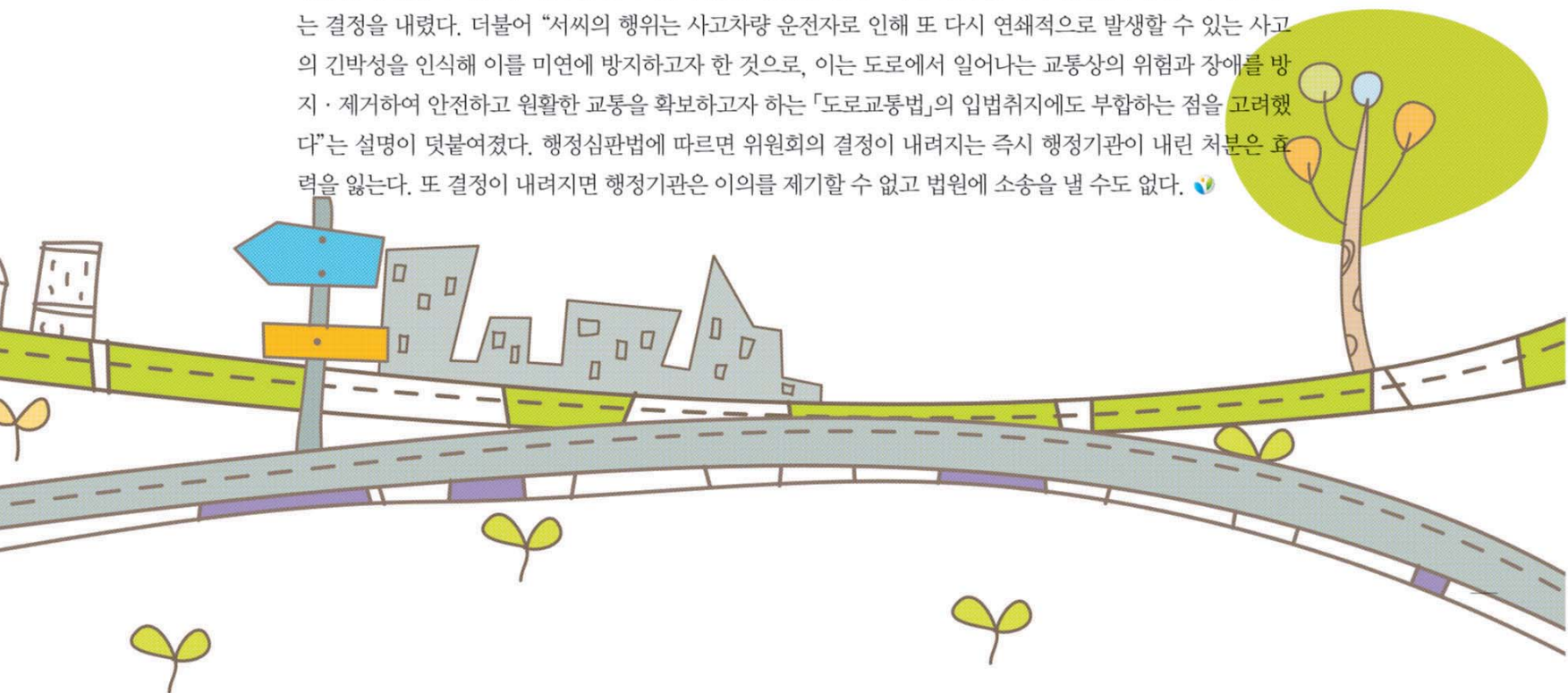
서씨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화물차에 올라 정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발생 가능한 또 다른 사고를 막는 동시에 현장에서 뺑소니를 친 정씨를 검거하기 위해서였다. 100m 정도 나아갔을 때였다. 아니나 다를까. 도주하던 정씨의 차량은 인근 사거리에 이르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김모(48, 남)씨의 오토바이를 또 다시 들이받았고, 그제야 도주를 멈췄다. 서씨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정씨의 승용차 열쇠를 빼앗은 후 곧장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이 수개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씨는 운전면허취소 기준치인 0.100%를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씨의 운전 면허는 취소되었다.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행위

그런데 뺑소니범인 정씨를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씨 역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일이 문제가 되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정씨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정지 기준치 0.050%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서씨에게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씨는 이러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남 화순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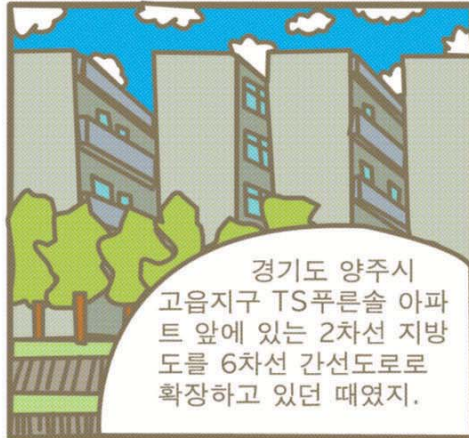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씨가 운전면허정지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씨의 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운전면허를 정지’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서씨의 행위는 사고차량 운전자로 인해 또 다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긴박성을 인식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또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없다. 🌈





—(03) 양주 TS아파트 앞 교통체계 개선





경기도 양주시
고읍지구 TS푸른솔 아파
트 앞에 있는 2차선 지방
도를 6차선 간선도로로
확장하고 있던 때였지.



그런데 원래 있었던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없애자고 한 거야.
이 넓은 도로에 단순히 차가
우회전만 되는 거지. 거기다
버스정류장도 멀어지고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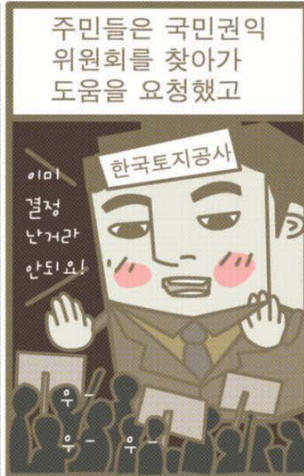
그럼 주민들이
불편해지
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주민들은 항의
했어. 신호등을
폐지하지 말고,
버스정류장도
이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요구를 쉽사리
들어주지 않았어.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냐!!



주민들은 국민권익
위원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미
결정
난 거라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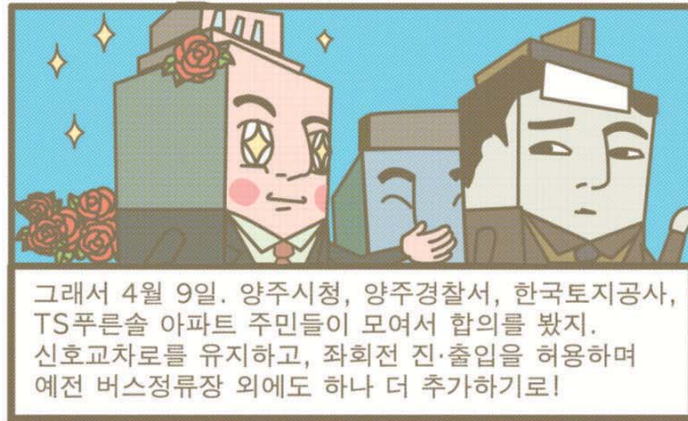


진정한 권익위

아파트 진·출입 제한.
기존 좌회전·U턴 차량의 우회로
인한 통행불편 증가.
횡단보도 폐지로 인한 도로횡단
불편과 보행거리 증가.
버스정류장 이전으로 인한 대중교통
접근성 저하와 교통약자의 불편 증가



주민들의 사연을
듣고 조사를 한
국민권익위는
그것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4월 9일, 양주시청, 양주경찰서, 한국토지공사,
TS푸른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합의를 봤지.
신호교차로를 유지하고, 좌회전 진·출입을 허용하며
예전 버스정류장 외에도 하나 더 추가하기로!



차량 < 인간, 자가용 >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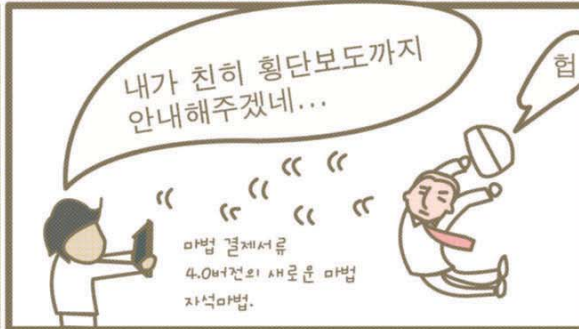
차량보다 인간, 자가용 보다는 대중
교통이 우선이라는 예를 보여준
좋은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차량보다
인간,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라...



차량보다 인간!
인간이 우선!
그러니까 전
바빠서 이만...



내가 친히 횡단보도까지
안내해주겠네...

“ “ “ “ “ “
마법 결재서류
4.0버전으로 새로운 마법
자석마법.



그런데
과장님도
지각이세요!!

Fin.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고충을 처리해드립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 문을 두드리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담센터와 상담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제주에 지역상담센터를 두고 온 국민들의 억울함을 직접 해결해 주고 있다. 대구의 한 민원인이 국민권익위 대구지역센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한 뒤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사연을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김영순(가명)입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의 대구상담센터를 통해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 가족은 1997년 IMF 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월세 방을 얻어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모 신용정보라는 곳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IMF 이전, 남편은 사업 자금 문제로 친구가 운영하던 모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때 차용했던 3,0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남아있던 원금 2,000만 원과 연체이자 2,000만 원, 합계 4,000여만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대출 당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적금식 대출을 받았고 충실히 그 대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돈을 대출했던 그 신용협동조합이 파산으로 문을 닫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우리 부부는 대출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원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라는 모 신용정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당시 보증을 섰던 친정오빠의 주택을 경매에 붙이겠다고 하는 것 입니다. 친정어머니까지 계시는 오빠의 집을 경매에 붙이겠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2006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대신해 살면서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법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다니며 원금만 분할 상환하겠다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캄캄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대구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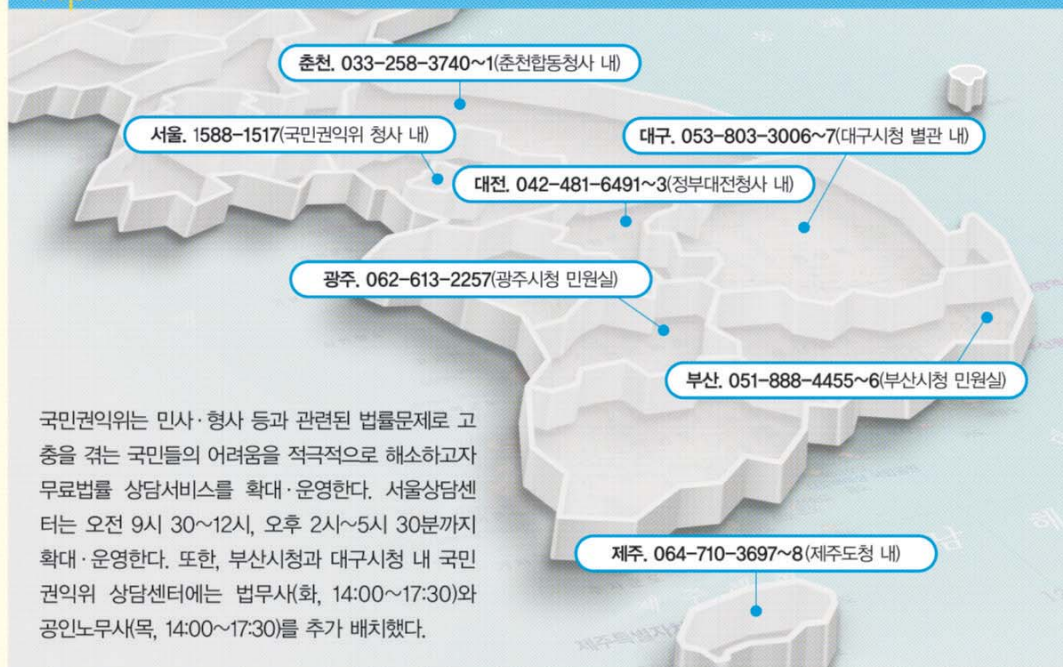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청와대 민정실로 전화했고 민정실에서는 대구시청 2층에 있는 국민권익위 상담센터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부라부라 국민권익위를 찾은 저는 상담센터에서 임석천 조사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조사관님께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던 중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몇 번이고 상담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조사관님은 이런 저를 진정시키시며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라며 위로해 주셨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 상담이 끝났음에도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조사관님이 너무 고맙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임 조사관님은 제게 독촉하던 신용정보에 전화를 했고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셨습니다. 그 후 저에게 금융위원회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정신 없이 금융위로 향하는 저에게 조금 전 통화했던 신용정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요구대로 원금만 상환하도록 해주겠다고 금융위로 가지 말고 신용정보로 찾아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사정을 해도 절대 안 된다면 일을 대구상담센터에 계신 임 조사관님의 조치로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은 후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을 때 국민권익위를 찾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대구상담센터의 임석천 조사관님을 비롯해 힘없는 민원인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조사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Tip.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비리사건을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청에 신고했던 교사 김혜순(가명)입니다. 교내 비리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보호보상과 박혁구 사무관님께 많은 도움을 받아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편지를 씁니다.

내부비리신고 후 신변의 위협 느껴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은 학생교육은 안중에도 없이 학교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전근을 와서 학교실정을 잘 모르는 몇몇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진정으로 학생 교육 및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18명의 뜻있는 교직원과 학부모들과 학교장의 비리를 교육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을 한 뒤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저에게 고발 전 괴로웠던 불면의 밤도, 보복의 두려움도 눈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지리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교장은 우리가 고발한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음해세력이 펼치는 음모라며 역공을 퍼부었습니다.

우린 하는 수 없이 교육청에 가서 여러 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이 사실이 신문과 방송 등 매스컴에 보도되었고 기자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보도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출두 통지서가 날아왔고 19명의 교직원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검찰에서 소환장까지 날아왔습니다.

순간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한 일인 만큼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퇴근 후에 밤이 늦도록 경찰서에 불러 다니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장의 비교육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해 교육청에 내부신고를 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사건이 확대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장은 서명에 동참한 교사들에게 전화로 협박하고 전국단위의 학부모단체까지 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죠.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죽을 힘도 없었습니다. 교장이 나타나 보복하는 꿈을 꾸다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처럼 우리들의 신변을 지켜준 박혁구 사무관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우리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박혁구 사무관님이었죠. 잔뜩 긴장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너털 웃음으로 제 마음을 안정시키며 진지하게 상담해 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문제점을 짚으시며 대처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용감하게 잘했다”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무관님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등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사무관님께서서는 내부 신고자들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육청 담당관님께 직접 전화하셨고,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전화를 걸어도 항상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실한 공무원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의 일처럼 상담해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던 제 마음은 사무관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안정되었습니다. 박 사무관님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박 사무관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이 사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밝혀졌으며 저는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무관님께서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고마운 마음을 교단에서 한 알의 썩어가는 밀알이 되어 값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

고 마 워 요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국민권익위원회로 인해 민원을 해결하셨던 분들의 가슴 따뜻한 사연을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우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 대변인실 <국민권익> 담당자 앞 e-mail : soljy@acrc.go.kr

부패 신고자의 안전지킴이

국민권익위 보호보상과
박혁구 사무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패신고도 중요하지만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은 부패신고를 했을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고자를 보호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호 '기분 좋은 편지'의 주인공은 보호보상과 박혁구 사무관의 도움으로 피신고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보호보상과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이 있거나 공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과 포상을 해주는 부서이다. 신고자 보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신분비밀보장',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 신변의 위협을 받을 경우 보호해 주는 '신변보호조치' 등이다.

박혁구 사무관은 부패신고로 인해 협박과 보복을 당한 이들을 보호하고 안심시키느라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하다. 갖은 협박과 보복,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지쳤을 신고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 '기분 좋은 편지'의 주인공 역시 박 사무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학교장이 승진을 빌미로 교사들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신고자는 비록 학교장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부패행위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신고한 사람이었죠."

학교장은 해당 교육청의 감사가 개시되자 신고자들을 색출하여 괴롭히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면서 파장이 커지자 신고자는 점점 지쳐갔다.



“

신변보호를 받으려면 보호
조사관과 신고자의 유대감
이 필수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
가 되어있다는 믿음을 먼
저 심어줘요”



보호보상과 팀원들이 신고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회의하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보는 시선
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조차 신고자를 이해 못 하는 경
우도 있기 때문에 신고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신변보호를 받으려면 사무관과 신고
자의 유대감이 필수이기 때문에, 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기에 앞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
어있다’라는 믿음을 먼저 심어줘요.”

박 사무관은 이번 사건은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관련되어 있
어서 자칫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법
률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었고, 언론과 접촉할 때 명예훼손 등
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학교장이 신고자를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려는 시도를
못하도록 해당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였다고 한다.

신고자 보호제도를 요청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신고자 보호제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우선 신고방식이 중요하다. 부패신고를 하기 위
해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신고를 어느 기관에 하느냐에 따라 보호여부가 결정
된다. 부패신고는 국민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과 감독기관에 해야 하며, 만약 언론이나 인터넷 등
을 통해 부패행위를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
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부패신고를 하기 전에도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제일 먼저
신고를 했을 때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아군’을 만든다. 단,
신고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고 신고를 했을 경
우 만약의 사태에 대한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만약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보복을 당했을 경우,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보
다는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요즘 박혁구 사무관은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국민
의 안전·건강·환경 등에 위해를 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방
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고자 보
호제도는 공직의 사유화와 국가재정의 낭비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도 통합적인 보호
를 받기 곤란하여 보복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안타까움
을 느낀 그는 저비용·고효율의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
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제정에 힘을 쏟고있다.

“부정부패는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
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이익 처분이 예상될
때에도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신고를 망설이
고 있다면 국민권익위를 믿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부패신
고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

신고자 보호제도 요청방법

- **상담전화** : 02-360-6640~9(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보호보상과)
- **우편이용**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광명빌딩 구관 19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보호보상과
- **팩스이용** : 02-360-6873

물안개 가득한 두물머리에서 다시 만나요!

글 | 국민권익위원회 고영창 조사관

민원서류에 적힌 민원인의 주소 '두물머리'를 보는 순간 오래전, 내가 사진 찍는 일에 미쳐 돌아다닐 때가 떠올라 상념에 잠겼다. 추운 겨울 장엄한 일출을 찍기 위해 추암의 바닷가에 서서 떨던 기억들. 그 추억의 한 조각인 양수리의 두물머리는 내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아련한 곳이다. 그 양수리에서 민원이 온 것이다.

민원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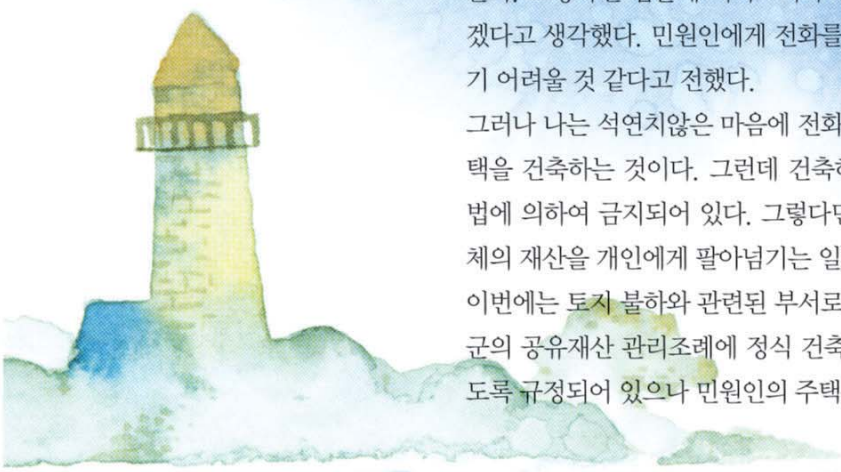
1969년경, 작고하신 아버지께서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는 집을 군유지(당시는 국유지)에 무단으로 축조하여 30여 년을 살고 있었다. 이 무허가건물을 헐고 새집을 지어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싶는데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 건축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30여 년 된 무허가건물의 붕괴가 우려되니 하루빨리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곧바로 해당군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내용에 대해 문의하니 "그 민원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민원인이 경기도, 법무부, 감사원 등 민원을 수도 없이 제출했으며 그 때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도와줄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었으며,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담당자의 의견은 너무도 명쾌하였다.

나 역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를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법률에 의거·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어렵지만 이를 민원인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 제출한 민원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위원회에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나는 석연치않은 마음에 전화를 끊은 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민원인의 최종목표는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는 군유지이다. 군유지에는 영구구조물의 축조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민원인 소유로 즉, 불하(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를 받으면 될 것 아닌가?

이번에는 토지 불하와 관련된 부서로 전화를 돌렸다. 담당자는 토지 불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유는 군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식 건축물(허가받은 건물)에 한하여 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불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주택은 무허가건물이기에 토지 불하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양평군 조례개정으로 민원을 해소하다

새로운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난 나와 민원인은 재산관리부서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축조된 무허가건물이 점유한 시유지도 불하해주는데, 군이 양평군에서는 1981년 이전에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불하해주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담당과장에게 물었다. 그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나는 상황파악을 한 후 민원인과 군청 관계자에게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양평군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양평군 조례를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할 경우 민원인 점유토지의 불하도 가능한 것이므로, 양평군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위원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양평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 양평군은 이에 따라 군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하여 민원인을 포함한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제안하기로 했다. 그제야 민원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사무실로 돌아와 과장님께 보고하고 즉시 변호사와 함께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모두들 양평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조해 의외로 빠른 속도로 민원처리가 진행되었다. 드디어 전체회의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군청에 통보하자 군청에서도 곧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여기 상담실인데요, 민원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아침 일찍부터 찾아 왔을까 의아해 하며 상담실로 내려가니 “고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민원인이 기쁨에 넘쳐 큰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차를 한 잔 권하고 상담실에 앉으니 국민권익위에서 보내준 공문을 받고 너무나 기뻐 한숨도 못자고 달려 왔다는 것이었다.

기뻐하는 민원인을 보며 처음 국민권익위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무시하려고 했던 점이 미안해졌다. 아무리 간단하게 제출한 민원서류라 해도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민원을 제출한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민원인은 집으로 가기 전 “조사관님! 물안개 가득한 두물머리에 오시지 않을까요? 조사관님이 오시면 아름다운 우리 동네 구석구석 소개해 드릴게요”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물안개 가득한 두물머리 강가에 꼭 다시 들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

부패방지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

2008. 5. 1(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종합시책평가 우수기관 **코레일** KORAIL

청렴열차로 고객을 사로잡다!

2008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학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13회 국제반부패회의가 열렸다. 이때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청렴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2006년에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던 코레일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다양한 청렴교육과 프로그램으로 1년 만에 청렴기업이 될 수 있었던 코레일을 다녀왔다.

꿈만 같았던 '전국 일일생활권'을 가능케 했던 코레일. 이제는 반나절생활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코레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공기업이다. 그러나 이름이 친숙하다 하여 이미지까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코레일은 매년 평균 수치를 밑돌다가 결국 2006년 최하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고객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고객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사실 청렴조사팀의 이윤재 팀장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예전에 한국철도공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한국철도공사의 '철' 자에서 위의 점 하나 빼보 세요, 그게 바로 코레일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공기업 최초로 2007년, 2008년 연속 부패방



1. 2007~2008년 부패방지 종합시책평가 연속 2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 3. 코레일의 청렴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실 청렴조사팀 직원들, 기업의 청렴을 위하여 하루 24시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4. 코레일은 1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부패방지 종합시책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여 청렴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 종합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불친절하고 부패한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지 1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 이 짧은 시간 안에 청렴한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2006년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자 사장님이 이제부터 코레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패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직원들 역시 불평불만 없이 청렴한 코레일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CEO의 선언, 그리고 직원들의 다짐. 이는 바닥으로 떨어진 코레일의 명예와 신뢰를 짧은 기간 동안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로운 아이디어 뱅크, 청렴지킴이

부패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청렴정책을 만들어야 했다. 코레일은 내부적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해 코레일만의 청렴정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청렴지킴이’이다. 코레일에 총 731명의 청렴지킴이가 있으며 이들을 통해 다양한 청렴정책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 가운데

나온 대표적인 아이디어 사례로 청렴사례를 홍보하는 ‘청렴홍보대사’가 있다.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벽에 붙은 ‘엘리베이터 홍보대사’ 포스터를 보고 얻은 아이디어라고 한다. 이처럼 청렴지킴이들은 날마다 청렴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행동강령 상담, 청렴시책 개발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패야 물러가라! 청렴조사팀

현재 코레일의 청렴업무를 실시하는 감사실의 ‘청렴조사팀’이다. ‘Clean KORAIL 구현’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24시간 부패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상시밀착기동 암행감찰반’이 있다.

“상시밀착기동 암행감찰반이란 부패유무에 대해 상시로 살피고 조사하는 조직입니다. 총 3개조로 한 팀에 2명씩 구성되어 있죠. 또한 ‘부패추방센터’라는 익명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설을 앞두고 돈 봉투가 오고가는 것을 적발하여 당사자들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5. 2008년 코레일은 부패지수 zero를 달성하였다 6. 부패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



사건은 암행감찰반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부패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10만 원 이하의 금품이 오고갔을 경우에는 '정직' 처분을, 10만 원 초과면 '해임' 처분을 내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패행위 근절과 고객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한 '클린콜센터'는 고객들과의 통화를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정신, 청렴도 등을 조사한다.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청렴 교육

기업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청렴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코레일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를 상승시켰다. 그 첫 번째로 '청렴학교' 프로그램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8시간 씩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윤리경영교육' 이란 프로그램은 직급에 따라 과정이 모두 다르며 매년 4회 실시하여 1만 명이 수료하게 된다.

간부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사이버 청렴교육'과 '국가청렴지도자 과정'이 있다. 사이버 청렴교육은 1년에 4회 실시하며 6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지만 수료할 수 있다. 국가청렴지도자 과정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함께 실시하는 산학협력사업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이 과정을 수료한 임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소속의 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시킬 의무가 생긴다.

코레일은 외부 강의도 실시하고 있는데 '상임감사 청렴특강'과 '청렴홍보대사 특강'이 바로 그 예이다. 상임감사 청렴특강은 감사장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청렴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총 16번의 특강을 하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청렴분야의 전문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일반을 대상으로 코레일의 청렴사례를 홍보하는 동시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총 48회 실시하였으며 4,600명의 수강생들이 청렴교육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청렴한 경영이 왜 중요한지, 부패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배웠다. 이 외에도 청렴골든벨, 성과 인센티브 지급, 클린코레일 페스티벌 개최 등 재미와 즐거움을 줌으로써,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청렴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올해의 목표는 청렴지수 9.52점을 달성하여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코레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코레일을 믿고 열차를 이용해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그것은 코레일이 꿈꾸는 미래이다. 🌈



● ● ● 공용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돼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 · 선박 ·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공용물(재산)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
- ▶ 청사, 관사, 공용차량, 건설중기 등

N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L씨.

그는 사무실 내에서도 알아주는 짚돌이로 유명하다.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술 한 잔을 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밥을 사먹는 돈이 아까워 손수 도시락까지 싸 다닐 정도다.

그러던 어느 날 L씨의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 L씨는 자신의 손으로 고치겠다면 팔을 걷어붙였지만 몇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서비스기사를 불렀다.

서비스기사가 왔지만 한참을 들여다 본 기사는 “선생님, 이 기종은 10년 전 제품이라 부품이 없어요. 그냥 버리시는 게...” 라고 말했다.

L씨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5년은 더 사용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고민을 하던 중 시청 숙직실에 있던 공용세탁기가 떠올랐고, 남모르게 세탁기를 집으로 들여 놓았다. 흡족한 L씨는 세탁기 구입비를 줄였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L씨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되었다. 🌈





感, 여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푸르른 나무들이 싱그러움을 한껏 뽐내는 요즘,
따뜻한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멀리 떠날 수 없다면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가까운 공원이라도 잠시 들리는 것은 어떨까요?
여유는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두고 한 박자 천천히 여유를 느껴보세요.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 38 | 여행의 재발견
- 42 | 문화로 보는 세상
- 44 | 돈버는 방법
- 46 | 생활법률110



여행의
재발견

38
ACRC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글 | 정호진(여행작가) 사진 | 박성희

가난뱅이 재상 화려하게 부활하다

광명 오라 이원익 사적지를 찾아서

"세상사람 중에 형제가 화목지 못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부잣집에선 그러한데, 이렇든 재물이 있으면 다들 마음이 생겨 천륜을 상하게 하니, 재물이 바로 빌미가 되는 것이다. 자손들은 절대로 옳지 못한 재물을 모으지 말고 불인(不仁)한 부를 경영하지 마라. 다만, 농사에 힘써 굶어죽는 것을 면하면 옳을 뿐이다."

오라 이원익 선생의 남길 유서 중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안양 쪽으로 달리다 보령 지해안 고속도로와 만나기 직전 왼쪽 길가에 전통 양식 건축물이 고즈넉하게 들어서 있다. 그곳이 바로 조선시대 정배리로 이름을 떨친 오리 이원의 선생을 기리는 충현박물관이다. 그곳을 찾아가는 길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눈여겨 살펴보지 못하면 낮은 살림집들이 에워싸고 있어 나그네처럼 동네 한 바퀴를 맴돌지도 모른다. 충현박물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물만을 전시하는 전시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이원의 선생이 말년에 머물던 집과 종택, 인조임금이 하사했던 '관감당(觀感堂)'과 그가 거닐던 정자, 사당인 오리영우(梧里影宇), 충현서원지(忠賢書院址), 거문고를 타던 바위까지, 이원의 선생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임금이 늘 가까이하고자 했던 신하

이원익 선생은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냈으며 ‘오리정승’으로 명성을 떨쳤다. 태종 5대손인 이원익 선생은 선조 때 청백리에 뽑혔으며 문장이 뛰어나고 성품이 원만해 정적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는 평안도 순찰사, 도체찰사가 되어 왜군과 맞서 싸워 큰 공을 세웠으며 그 공로로 선조 37년(1604년)에 호성공신 2등으로 완평부원군에 봉해지기도 했다. 그만큼赫赫한 공을 세운 이원익 선생은 임금이 늘 가까이하고 싶어 했던 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잘 나와 있다. 스물 한 번이나 영의정의 사직서를 받아야 했던 인조 임금은 결국 “지금 국가의 일로 말한다면 결코 윤택할 수 없다”면서 “다만 생각하건대 경이 오랜 병중에 있으면서 해직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한다면 필시 병을 조리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기에 부득이 억지로라도 경의 뜻에 부응해 주어야 하겠다”며 청을 들어주었다.

두 칸짜리 초가집만 남기고 간 재상

충현박물관 앞마당을 기준으로 왼편의 작은 계단을 타고 오르면 문패가 달린 종택이 보인다. 이원익 3대 직계손의 문패로 1960년대 말 13대 직계후손인 이승규 교수가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까지 이원익의 후손이 대대로 거주해왔다. 이 종택은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행랑채가 배치되고, 그 옆에는 一자형 사랑채가 달린 형태로, 20세기 초 경기 지역 상류 주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종택을 나와 작은 문을 하나 건너니 경기도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된 관감당이 나온다. 이 건물은 충현박물관 경내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물로 이원익 선생의 무소유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곳은 이원익 선생이 말년에 보냈던 사저로 인조임금이 하사한 5칸짜리 집이다.



1. 오리 이원의 영정을 모신 '오리영우' 2. 오리영우의 내부 3. '바람에 목욕한다' 뜻을 지닌 풍목대 4. 이원의 선생의 영정, 친필 등의 유물이 전시된 전시장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인조 9년(1623년) 정월 10일, 임금이 승지 강홍중을 보내어 이원익을 문안한 뒤 “그가 사는 집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강홍중은 “두 칸 초가가 겨우 무릎을 들일 수 있는데 낮고 좁아서 모양을 이루지 못하며 무너지고 허술하여 비바람을 가리지 못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재상이 된 지 40년인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니, 청렴하고 결백하며 가난에 만족하는 것은 고금에 없는 것이다. 내가 평생에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 공로와 덕행뿐이 아니다. 이공(李公)의 청렴하고 간결함은 모든 관료가 스승 삼아 본받을 바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5칸짜리 집 한 채를 이원익에게 하사했다.

관감당 앞에는 이원익 생전에도 있었던 약 400년 수령의 측백나무와 ‘탄금암’이라는 한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다. 측백나무 밑자락에 놓인 평평한 생김새의 탄금암은 이원익이 살아 있을 때 거문고를 타던 곳이라 하여 이름을 그리 지었다고 한다.

관감당 뒤편으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1호인 ‘오리영우’가 있다. 내부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0호인 이원익의 영정이 있는 오리영우는 숙종 19년(1693년) 10월에 건립되었다. 그 뒤편으로는 충현서원이 위치해 있는데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너른 터 위에 자리 잡은 이원익 선생의 사적지는 어찌 보면 궁궐처럼 화려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가난했던 재상으로 알려진 이원익 선생과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이원익 선생이 남긴 자취가 아니다. 선조의 숭고한 정신문화를 후대에도 널리 알려야 한다는 뜻에서 후손들이 충현박물관을 마련한 것이다. 각계 인사들의 자문을 받아 재단법인 충현문화재단을 세우고 박물관을 지어 사적지를 관리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래서일까, 평생을 두 칸짜리 집으로도 만족하며 누구보다 청빈을 몸소 실천하던 이원익 선생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사람 앞에 나서며 멋쩍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



오리 이원익 선생 충현박물관 이모저모

충현박물관은 재단법인 충현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사설 박물관이다.

● 개관시간

아침 5시~오후 5시(동절기 11월 초~3월 말)

● 정기휴관

매주 월, 목요일, 신정·설·추석 등 명절연휴

● 관람요금

- 학생 및 청소년 2,500원 / 성인 3,500원
- 단체 20인 및 65세 이상, 7세 이하 20%할인
- 유치원생 단체관람 시 50% 할인

● 관람방법 : 전화 및 인터넷 예약

- 문의 : 02-898-0505(www.chunghyeon.org)
- ※ 관람을 원할 경우 반드시 예약을 해야만 개방을 하며, 주차가 어려우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

- 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로 나와 5627번 버스 타고 충현박물관앞에서 하차
- ② 1호선 석수역에서 시흥대로 쪽(왼쪽 출구)으로 나와 마을버스 1번 혹은 1-1번 타고 공영주차장 앞에서 하차

아버지와 다투고 난 어머니는 이불 흘청을 뜯어내 큰 다라이(대야)에 쭈서 박아 놓고 밟기 시작했다. 신나게 물장구치며 밟는 그녀가 부러워 “나도~ 나도!”라고 때를 쓰기도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밟음이 분노를 식이는 것인지, 왜 그렇게 괜한 이불에 화풀이를 하는지를. 이제야 손빨래의 맛을 알았다. 때가 쏙 빠진 빨래를 탁탁 털어서 햇볕 잘 드는 빨랫줄에 내다 걸 때의 기분을 말이다. 이상하게도 옷의 묵은 때가 사라질 때 마음속 커켜이 쌓인 때까지 싹 사라지는 듯하다. 뮤지컬 <빨래>는 그런 기분을 잘 알고 있다. 때 묻은 빨랫감 같은 일상의 얼룩.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뮤지컬 <빨래>는 일상 속의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진학의 꿈을 안고 상경했지만 자취생활 6년 동안 꿈을 잃어버린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27살 강릉처녀 서나영,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불의를 참아내는 몽골출신 불법이주 노동자 솔롱고, 장애인 딸을 방 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주인 할머니 등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가난하고 힘겹지만 그 안에서 자라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 경쾌한 리듬을 더한 뮤지컬 <빨래>는 봄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다.

고단한 일상의 얼룩을
빨래로 지워요!

뮤지컬 <빨래>

빨래가 바람에 실 듯, 인생도 바람에 실어

우리 이웃들의 고단한 서울살이를 그리는 뮤지컬 <빨래>는 2004년 추민주 연출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작품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듬해 짧은 공연기간에도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작사상과 극본상을 수상했다.

<빨래>는 ‘우리 이웃들의 고단한 서울살이’의 사실주의를 붙여 넣었다. 아마도 이 점이 <빨래>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현실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추민주 연출가의 실제 경험이 자연스레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서점에서 일하다 상경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입학했다. 집값이 만만치 않은 덕에 서울 변두리 지역의 반지하방, 옥탑방 등에서 주로 생활을 하며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살아왔다.

그 사이 그녀는 다양한 서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웃으로 만날 수 있었다. 항상 먼저 인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녀는 반갑게 인사를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나한테 말하기 싫으세요?”라고 한 것이 극



중 나영과 솔롱고의 만남에서 그대로 재연된다.

여기에 어둡고 다소 무거운 소재임을 고려해 만화적 감수성과 위트 넘치는 대사, 밝고 경쾌한 노래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뮤지컬 <빨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희망의 메시지를 뮤지컬에 빼놓을 수 없는 백미인 노래로 풀어냈다. 총 18곡의 노래가 연주되는데 노래 대부분은 '서울살이 몇 헨가요', '참 예뻐요', '슬플 땐 빨래를 해' 처럼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난 빨래를 하면서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잘 다려진 내일을 걸치고 오늘을 살아요.”

뮤지컬 <빨래>중에서

뮤지컬은 하루하루 힘든 일은 빨래를 하는 기분으로 얼룩을 지우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자고 이야기한다.

사실상 뮤지컬에 등장하는 이들에게는 뚜렷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불법으로 이주해 불의를 참으며 살아가는 솔롱고도, 비정규직에 설움을 한몸에 받는 서나영도, 자신이 죽으면 남을 딸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주인 할머니도, 그들 모두에게 희망은 쉽게 찾아오지 못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잃어버린 희망을 하나씩 찾아간다. 첫 인사도 나누기 힘들었던 솔롱

고와 나영이 사랑하는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뮤지컬은 '사람이 곧 희망'임을 이야기 한다.

“당신의 젖은 마음 빨랫줄에 걸어요. 바람이 우릴 날려줄 거예요. 당신의 아픈 마음 털털 털어서 털어요. 우리가 말려줄게요.” 뮤지컬 <빨래>중에서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더욱이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시름이 가득한 지금 뮤지컬 <빨래>는 희망이다. 비록 남루한 현실일지라도 그 안에 희망이 살아있다면 언제든 우리의 삶을 바꿀 줄 테니. 🌈

M u s i c a l * I n f o



- **공 연 명** 뮤지컬 <빨래>
- **공연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565석)
- **공연기간** 2009년 4월 28일(화)~6월 14일(일)
- **공연시간** 화~금 8시 / 토 3시, 7시
일요일 및 공휴일 2시, 6시(월 휴관)
- **관 람 료** 달동네(R) 5만 5천 원
옥탑방(S) 3만 5천 원
- **공연문의** 원더스페이스 02-744-1355
www.wonderspace.co.kr

感

돈 버는
방법

경제불황시대, 가정 경제를 살리는 법은 따로 있다!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

지난 3월 12일, 청와대 지하벙커에 마련된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의사봉 망치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다'는 속담은 이럴 때 쓰는 건지 모르겠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탓에 벼랑 끝에 내몰린 노인과 장애인, 실직자, 그리고 저소득 소상공인과 학생들은 이번 대책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과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때아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맞은 서민들의 빈곤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일시적 빈곤층 혜택 늘었다

최저 생계비 보다 못한 소득(4인가족 기준 133만 원 이하)으로 생활하지만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은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수는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 원, 2인 가구 19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0만 원, 5인 가구 35만 원이다.

지금까지는 생계가 어렵지만 재산이 8,500만 원을 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다. 가구주가 질병이나 사고로 근로능력을 상실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게도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가구주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소득이 떨어진 경우에는 현행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연간 최대 127만 원까지 교육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별로 대도시는 재산이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7,75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물론 위의 긴급 지원대책을 통하지 않고 일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월소득 159만 원 이하,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6개월간 공공근로에 참여해 월 83만 원을 현금과 상품권 형태로 받는 방식이다. 주로 불황으로 실직한 가장이나 휴·폐업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상품권은 지역 내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이같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소득과 근로능력 유무 등을 판단해 지원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

학자금대출 천천히 갚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 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취업을 못해 소득이 없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장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민생대책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시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가계소득이 연 4,684만 원 이하이면서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가계소득은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와 본인의 소득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기혼이면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친 것을 말한다.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돼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라도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일반은행 대출이 아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1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재학생들에게는 대출금리가 높았던 지난해 1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소득 수준별로 0.3~0.8% 포인트의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다.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장려금'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후 3개월 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 후 30일 내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 한 명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 18세 이상 자녀가 있더라도 2등급 이상 장애, 또는 지적장애 등 일부 3등급 장애를 가진 자녀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대상이 된다. 다만 5,000만 원 미만 주택이 두 채 있으면 전 재산의 합이 1억 원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없다. 🌈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국세청 종합상담전화	1588-0060
근로세제 홈페이지 상담전화	1544-0090

불법대출의 덫에 걸리다!

사금융 이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경기불황으로 너도나도 힘든 요즘, 인터넷과 TV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불법 대출, 이른바 사금융으로 서민들의 경제가 더욱더 흔들리고 있다. 불법대출의 덫에 걸린 이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 소개한다.



Q 사금융 이용한 사천만 씨, 연 730% 이자를 다 내야 하는 것인가?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천만 씨는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라도 쓰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채의 무서움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터라 고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10년을 넘게 운영한 식당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고민 끝에 사채업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1,000만 원을 빌리면서 1일 2%라는 엄청난 이자를 내기로 약정을 하고 말았다. 그후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천만 씨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사천만 씨는 대부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자를 다 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 미등록 대부업체일 경우 이자 30%만 내면 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천만 씨는 이자를 다 낼 필요가 없다. 사채업자가 대부업 등록 업체가 아닐 경우 연 30%까지만 내면 된다. 대부업체 경우 연 49%를 넘지 못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의거해 연 30%로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업 제19조에 의하면 위 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불법 채권추심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

첫째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 또는 위력(폭행 및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때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둘째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관계있는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셋째 말이나 글, 음향이나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반복적인 이메일 발송이나 전화를 걸어 독촉을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갚을 것을 요구하거나 대환대출을 통하여 돈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 채무자와 관계있는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을 사용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넷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연락이 끊기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다섯째 업서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위의 사유 중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는 경찰에 고소해서 해결할 수 있고, 과태료에 처해지는 행위는 도청에 신고를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

Tip.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이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와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 제정한 법이다. 2005년 5월 31일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대부업법이 됐다.

1. 대부업자의 경우 최고 이자율은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연 49% 규정
2. 대부업법 제1조 제1항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개인 간의 금전거래나 ‘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연 30%(월2.5%)’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

위반 시

대부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위 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더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慶南日報

2009년 4월 6일 (사회)

“바가지·불법학원 처벌기준 통일해야”

권익위, 교과부에 내년 6월까지 개정 권고

‘바가지 수강료’ 등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역마다 달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2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오는 201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학원 불법행위 처벌규정은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라도 처벌기준이 달라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낳고 있는 것. 실제로 권익위가 지난 2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마다 처벌기준이 제각각이었다.

경남도는 대부분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말소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수강료 초과징수행위는 경남의 경우 경고·시정~말소로 규정돼 있지만, 인천(경고~정지 75일), 대전·대구·울산(정지~말소), 광주(경고~말소), 부산(경고~정지 60일), 경기(시정명령~말소) 등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도 경남은 정지~말소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강력한 제

재를 하는 반면 서울(시정명령~경고), 부산(경고), 인천·울산·광주(경고~정지) 대전(정지~말소), 대구(경고~말소), 경기(시정명령~말소) 등 각기 다르다.

또 설립·운영자 변경 무신고에서는 경남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지~말소인데 반해 서울(벌점 5~15점), 인천(벌점 10~30점), 부산(벌점 9~27점) 등은 경고에 그치고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경남은 모든 항목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해 놓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었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를 조사한 결과 전체 96%가 경고 및 시정명령에 그친 것

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역마다 수강료 초과 징수 등 사설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달라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가운데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지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학원이 학교시험 문제를 유출하면 처벌 받는 규정도 만드는 등 법률을 손질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수란 기자 ssr@gnews.co.kr

내일신문

2009년 04월 14일 (정체)

중국귀주성 국내 행정심판제도 관심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업무 배우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 간부 공무원들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14일 국내 행정심판제도를 견학하기 위해 방한한 중국 귀주성(貴州省) 정부의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귀주성 정부의 법제처장 추위를 단장으로 한 이번 방문단은 성(省) 정부의 법제, 행정심판, 사법(검찰·법원), 경찰 등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청장급 간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정부의 우수한 행정심판제도,

사법제도 등을 견학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데 권익위에 행정심판제도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권익위의 기능, 행정심판제도, 행정소송제도와 차이점, 행정심판기관 및 처리절차,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현황 등 행정심판제도 전반과 운영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방문단은 양국의 행정심판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토론한 후 우리의 행정심판제도가 중국정부와 귀주성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서울신문

2009년 04월 16일 23면(지역)

권익위, 사회약자 보듬기 나섰다

이동단체 등 직접 만나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해 시민들과의 만남을 크게 늘린다.

평소 정부 조직의 불합리성이나 공무원의 부장, 부패를 감시하고 제도 개선점을 찾아내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의 약자들을 직접 만나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15일 오전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22개 단체 관계자 50여명을 서울 서대문구 청사 세미나실로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부스르기사랑나눔회, 우리아이키르기시민연대 등 9개 아

동 관련단체를 비롯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13개 청소년 관련단체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권익위원회 등 관련 행정조직과의 온·오프라인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이들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 및 업무협력을 통해 결식아동과 불우청소년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동구 기자 yidonggu@seoul.co.kr

朝鮮日報

2009년 4월 23일 (사회)

“빈곤층으로 가야할 보조금 제가 이렇게 빼먹었습니다”

한 6급 공무원, 900만원 세금 도둑질 '자수'

지방의 한 시청에서 매달 20억 원 정도 규모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 6급 공무원 A씨는 2007년 3월 신청자들에게 실제 지급할 돈보다 36만 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를 알아보니 산하 읍·면·동에서 각각 복지전산망을 통해 생계급여 대상 및 금액을 시(市)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오류 등으로 신청액이 36만 원 더 부풀려졌는데도 A씨 자신이 이를 미처 모르고 시 회계부서에 그대로 신청했고, 회계부서는 또 그걸 그대로 내려 보낸 때문이었다.

A씨는 처음엔 '잘못을 바로잡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렸다.

이렇게 처음 횡령에 '성공'한 이후 A씨는 아예 매월 실체 읍·면·동이 신청한 금액보다 100여 만 원씩 부풀려 회계부서에 신청하기 시작했고 회계부서는 A씨가 달라는 대로 돈을 내줬다.

이런 식으로 A씨는 그 해 7월까지 4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챙겼다. 이 같은 A씨의 '세금 도둑질'은 최근 A씨 스스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자수(自首)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권익위가 전한 A씨의 '고백' 내용은 복지보조금이 공무원들 주머니로 졸졸 썰 수밖에 없는 사정을 생

생히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6000여명에 달하는 이 지역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혼자 도맡았다.

당초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의 입력 오류 등으로 발생한 차액을 A씨가 실사(實査) 과정에서 발견한 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자기 주머니로 빼돌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1인 처리 시스템' 때문이었다.

A씨가 생계급여 대상과 금액을 취합해 만든 계좌입금의뢰서는 2~3단계의 상부 결재를 거쳐 회계부서에서 지급이 결정되게 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의뢰서에 '허수(虛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던 '감시·검증 무방비'의 문제도 심각

했다.

복지보조금을 '은행 계좌 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현재 방식도 횡령을 가능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복지전산망에 연동된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통해 생계급여 대상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슬쩍 한두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고 이들이 돈을 지급 받는 계좌번호에는 자신의 차명계좌번호로 써넣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 왔다.

권익위는 "A씨 자신도 명의를 도용한 뒤 자신의 차명계좌로 인터넷 이체를 하는 게 가능한 것을 알고 처음엔 놀랐다고 한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서울신문

2009년 04월 29일 (사회)

리베이트 수수 의사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회귀병치료제의 지정기준이 현재보다 크게 완화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 식품안전 분야 등 126건의 행정규칙 개선을 보고 받았다.

권익위는 의료인이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관행이 적발되어도 처벌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로 면허가 정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권

익위는 또 회귀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귀약품 지정기준을 현재 국내 총 생산실적 10억 원 이하,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에서 15억 원과 150만 달러 이하로 각각 50%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만 표시하던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기를 첨가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국가 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동구 기자 yidonggu@seoul.co.kr

한겨레

2009년 04월 29일 (사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추진 국민권익위 복지부에 권고...내년 5월 70만 명 더 받을 듯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 명이지만,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은 153만 명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승용차 소득 환산율을 세분화하고 △범죄금 등으로 차량 처분이 어려운 경우 '선보장 후처분' 등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

단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의 올해 최저생계비는 132만6609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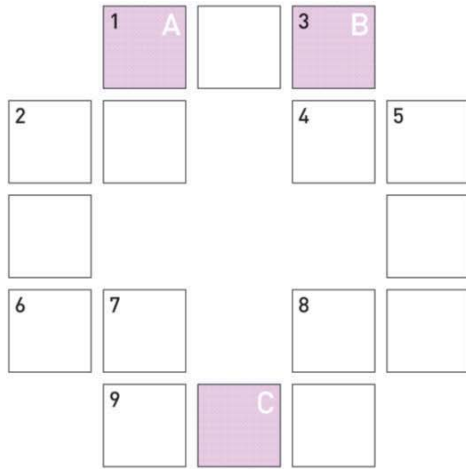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70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예컨대 사업 부도로 소득이 없지만 중증 질환을 앓는 자녀의 이동수단으로 2000cc 이상 차가 있는 사람이나, 지적장애 2급으로 취업을 못한 채 중학생 딸과 살지만 70살 넘는 부모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지급까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서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사연도 보내고~! 퀴즈도 풀고~!

『국민권익』은 독자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천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6월 25일)

‘기분 좋은 편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찾으신 여러분의 감사편지로 이루어집니다. 코너에 참여하고 싶은 분께서는 민원처리 등에 관련한 수기를 이메일(soljy@acrc.go.kr)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로세로 십자퍼즐, 핵심단어를 찾으세요!

가로 열쇠

1. 동물을 훈련시키는 사람.
2. 사는 곳을 옮기는 것.
4. 코끝이 둥글고 두툽한 모양의 코를 가리키는 말. 예로부터 코끝은 복과 재물을 저장한다 하여 이 코를 ○○라 불렀다. 복을 불러온다는 뜻을 갖고 있다.
6. '다음 날'을 뜻하는 한자어.
8.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리키는 말. 주말을 제외한 날.
9. 인체의 한 기관으로 공기가 폐로 가는 호흡통로. ○○○가 약하면 기침, 가래 등이 자주 생긴다.

세로 열쇠

1. 알고 싶은 것을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사건 ○○를 하다.
2. 조선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낸 인물로 호는 오리(梧里)이다. 대동법 시행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번 호 '여행의 재발견(38~41p)'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3. 관복, 제복, 교복 등 정해져 있는 옷이 아닌 자유로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가리키는 말.
5. 우리나라 철도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공기업. 이번 호 '청렴예찬(32~34p)'에 소개되었다.
7.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기록하는 것.
8. 평평한 땅

지난 호 퀴즈 정답

오죽헌

3+4월 퀴즈 당첨자

김희정, 황정숙, 문은미, 박정석, 김혜린

※ 문제 십자퍼즐을 채운 후 A, B, C에 들어갈 낱말을 조합하신 후 독자엽서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김희정 (부산광역시 북구)

직장여성으로서 출산을 하게 되면 으레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생각이 만연한 사회에서 저 역시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 '생활법률110' 코너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어 좋았습니다.

황정숙 (전라북도 군산시)

반 백 년 세월을 당신 몸 돌보지 않고 모으신 돈을 끼기에 사회에 내놓으신 떡볶이 할

머니. 북에 두고 온 자식들에 대한 죄스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늘 어려운 이들을 가만히 보시지 못하는 그 마음 심분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금천시장을 찾을 기회가 생긴다면 꼭 뵙고 싶습니다.

문은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요즘 한창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곤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계속 수법을 달리하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더욱 걱정되곤

했는데 소개해주신 방법을 꼭 기억해두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참, 부모님께도 꼭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박정석 (서울시 동대문구)

노자의 도덕경 중 '물처럼 되는 것이 최고의 도'라는 말이 새삼 생각납니다. 인생도 물처럼 흘러가며 진리대로(정석대로) 묵묵히 마음을 비우고 겸손의 미덕으로 최선을 발휘할 때 인생은 꽃보다 아름다운 것임을 새삼 되새겨 봅니다.

김혜린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기업이 국민권익위에 묻는다!'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최우선 과제 아닐까요?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곧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기에 우리 나라가 청렴해진다면 자연스레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 믿습니다.